

석유화학·정유, 정부 관리 받는다!

정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확대 ...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로 제재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에도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기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5년부터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부실징후 대기업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 및 금리 인상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약정을 이행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요 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까지 주 채무계열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시장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설, 철강, 조선 외에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업종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 건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2015년에 주 채무계열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활성화, M&A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에 절차 특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작업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1/12>